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담당 : 교육대전환위원회 반상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010-5128-2889

정책본부 심연미 교육선임팀장 010-9140-0533

이재명 후보 공약집 발간, ‘교육대전환’ 청사진 담았다

유아부터 초·중·고·대학, 평생교육까지 교육대전환 세부과제 제시

- 23일(수)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공약집 발간 기자회견 개최
-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까지 공정한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상생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전환’ 추진
-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시대, 기후 생태 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 양성 위한 교육체제 확실히 구축 할 것”
-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 공교육 국가 책임에 대한 의지와 검증된 실력을 지닌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교육대전환의 적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는 23일(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라를 위한 맞춤공약』에 담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10일 △아이 돌봄 국가 책임 △디지털 전환교육 △교육기회 사다리 복원 △행복한 ‘지요일’ (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지역·산업·대학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 △대학연구체제 전환 △평생학습체제 전환 등 8대 공약을 발표하여 ‘교육대전환’의 윤곽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교육공약집에 수록된 교육공약을 모두 발표함으로써 전체적인 청사진을 선보이게 됐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육은 물론 평생학습까지 걸쳐 ‘공정한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상생하는 교육’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했다.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초등부터 개인 맞춤형 수업, 기본학력 전담교사 확충 등 기

본학력 국가책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사업 확대 △교육취약계층 지원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등 공정한 대입제도 안착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공약으로 먼저 발표한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및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및 통학·돌봄 편의 확대 △기초학문분야 집중 육성, 학문 후속세대 안정적 지원 △특성화고 지원 확대 및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전문대간 컨소시엄 및 공유계약학과 추진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제 구축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교육 프로그램(전환학교제·한국형갭이어) 도입 △지역사회 협력 통한 교실·돌봄공간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대전환위원회가 공약집에 담은 공약으로는 △지자체·산업체·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혁신체제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대학평가제도 통합 및 후평가 체계 전환 △정부 내 대학서열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꼽았다.

또한, <공정>, <성장>, <상생>이 관통하는 이재명 후보 교육공약의 정신을 담은 교육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재구조화 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 풀뿌리 자치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 거버넌스 재편을 뒷받침할 공약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교육대전환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시대 및 기후생태 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약을 보완하고자 △초광역 권역별로 ‘4차 산업 전문대학원’ 신설 △디지털·인공지능 전문 교사 양성·배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탄소중립학교 도입 등을 챙겨 제시했다.

유기홍 교육대전환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틈날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며,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책임 의지와 공약을 실천해온 검증된 실력을 갖춘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교육 구성원들이 꿈꾸는 교육대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 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오랜 기간동안 교육현장의 의견을 들어가며 꼼꼼하게 마련한 교육공약을 품고 교육대전환위원회가 그동안 구성해온 지역별 교육대전환운동본부들 통해 국민들 곁으로 다가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 교육공약 전체’

교육 분야

1. 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 관리부처 통합, 안정적 재원 확보, 법률 제·개정으로 유아 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
 - 유보통합위원회 구성, 관련 부처·지방정부·교육청·학부모·어린이집·유치원 등이 참여하여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 장애 영·유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 교육 및 돌봄 기회 제공
- 국공립유치원 비중 상향 및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 동등 처우 노력
 -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통학버스 운영, 방학·돌봄 시간 조정
 -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 확대,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서비스질 제고
-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컨트롤타워 신설
 -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오후 7시까지 운영시간 연장, 돌봄전용교실 획기적 개선
 - 권역별 긴급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야간 및 토요일, 과밀·과대학교 돌봄수요 지원
 -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역협력체계(교육지원청+지방정부) 구축을 통한 운영·프로그램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도입
 - 국제적 추세에 맞춰 초등학교 전학년 동시 오후 3시 하교 추진
 - 국가교육과정과 별도 지역교육과정 도입으로 기본학력·예술체육·체험활동 등 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 안전하고 획기적인 공간 혁신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본학력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목표 단계적 추진
 - 코로나19 대응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초과밀학급(30명)부터 모듈러 교실(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우선 설치 추진
 - 과밀·과대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학급 증설 추진(주민개방 및 수익형 민간투자)
- 미래교육, 학생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확대
 - 30년 경과 노후 학교 시설 대상,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간 교육격차 등 고려

- 감염예방 환경설계디자인(IPTED) 반영, 'AI 기반 안티바이러스 교실 공간' 구축
- 미래학교 건물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 디지털 콘텐츠 구현을 고려한 학교공간 재구성

○ 지역사회와 협력한 학교복합시설 확대

- 체육관·주차장·수영장·공연장·돌봄시설 등 방과후·주말 주민 이용 개방(도시형)
- 학교 통폐합을 넘어 관공서·보건소·마을회관·돌봄시설·문화·체육시설 등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형 통합학교체제 구축(농산어촌형)
- 지역 여건에 따라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등 연계형 학교 자율 운영
- 수입이 예상되는 시설에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BTL) 검토

3. 경직된 학교를 혁신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의무교육단계 기본학력 책임 강화

-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본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 초등 단계부터 기본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기본학력전담교사 확충·배치
- 초등 단계부터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K-에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과 기본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 보정 실시
- 중3 단계에서 희망학생 및 학교에 대해 기본학습역량 진단 후 학습보충 지원

○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요일(지요일)' 도입

- 일주일에 하루 또는 교육과정의 20% 수준은 지역의 역사, 지리, 생태·환경, 예술, 스포츠 등과 결합한 현장 체험형 진로교육 실시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역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강화
- 교육기반 확충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 지역전문가 참여

○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교육 프로그램 도입

- 중학교 졸업생 중 희망자 대상 보충학습·진로체험 제공 전환학교제도 도입
- 고교졸업 후 대학 미진학자 대상 '한국형 갭이어' 도입

○ 기후·생태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강화

-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탄소중립학교·대학탄소중립캠퍼스 단계적 도입
-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탄소중립학교로 운영
- 친환경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탄소중립문화 및 환경생태교육 중점 실시

- 국가교육과정의 실질적 분권화, 자율화 확대
 - 고교학점제 모니터링, 수업의 질관리 및 평가 공정성 확보
 - 교육과정 학년별 시간 배당 일부 교육청에 위임, 교육과정 간소화 및 교과서 범위 축소
 - 고교학점제 일환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창의학점제’ 교육과정 도입

4. 코로나19 세대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세대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사업’ 확대
 - 방과 후와 방학을 활용한 학습컨설팅, 교과 보충, 튜터링, 정신건강 상담·치유 등 학습결손 프로젝트 제공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영유아 조기 특수교육 확대, 유치원 특수(통합)학급 확대, 유아특수교육 담당교원 확대
 - 장애학생 직업전환교육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연계 활성화, 장애 대학생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학력·학벌 차별금지 제도 마련
 - 모집·채용, 임금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능력이 아니라 학력과 학벌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차별적 요소 제한
- 교육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학생 및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확대 및 학교운영비 지원
 -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새터민청소년 지원 확대
 -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 지방정부 청소년 시설 확대와 모든 청소년에게 개방,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 강화 및 프로젝트 중심학교 확대

5. 개방·융합형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특성화고 지원 확대, 단계적으로 마이스터고·일반고로 전환 추진
 - 특성화고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교육과정 및 교사 임용·양성 제도 혁신
 - 산업현장의 유능한 인력이 실습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 특성화고를 신산업 중심 학과로 개편, 졸업 후 연계대학에 진학, 입시·학비 부담 없이 일·학습을 병행하는 P-TECH(특성화고-전문대), P-TECH Prime(특성화고-4년제 대학) 도입

- 특성화고를 단계적으로 마이스터고나 일반고로 전환 추진
-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체제 마련
 - 노동인권교육 강화, 산업직군·직종별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점검 강화
 - 현장실습생은 도제학생(학습근로자)으로 최저임금 적용
 - 학습기업에 금리우대,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청소년 유해·위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습 폐지
 - 공공기관·공기업 등 안전한 현장실습처 마련을 위한 범부처·지방정부 협력 강화
- 직업계고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시·도 취업지원센터 확대(권역별·직종별) 및 인력 보강, 지자체·기업체 연계활동 강화
 - 학교별 취업지원인력(취업지원관 및 취업전담교사) 확대
 - 졸업예정 학생, 졸업생까지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로 현장실습에 의존하는 직업계고 취업 관행 개선
 - 실무형 직업교육 청년 일자리 ‘매치포인트’ 사업 추진
- 전문대간 컨소시엄 및 공유계약학과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산업계 전문가와 공동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
 - 첨단·신산업분야 공유·협업 활성화
 - 전문대-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지역특화 전문대 육성

6. 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 AI 대학원 지원 사업 확대 및 초광역 권역별로 ‘4차 산업 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 비전공자를 위한 AI+X(자신의 전공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실시
 - 민간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AI 전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SW, AI, 빅데이터 교육 강화
 -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근거하여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SW, AI, Data 기반의 컴퓨팅 사고력 교육 등 정보 관련 교과 시간 추가 확대
 - 정보교과 외의 모든 교과에서도 디지털 교육과 AI, 빅데이터 활용 및 융합교육 추진
 - AI교육 전문센터 구축 및 디지털·AI교육지원단 구성으로 교육지원 강화
 - 중·고등학교 당 1명의 정보교과 담당교사 확보로 양질의 전문교육 담보
-

- 비대면 수업 확산에 대비, 학생 개인 수준 맞춤형 온라인 SW·AI 학습용 플랫폼 활용 확산
- 디지털 전환 사회를 선도할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K-에듀버스 구축
 - 유아, 초·중등, 대학, 직업 및 평생교육용 포털로 활용
 -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분석 기제로 활용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개인별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모든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디지털 교육 아카이브(DATA BANK) 구축
- 디지털·인공지능 전문 교사 양성 및 배치
 -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AI교육 강화 지원 사업’ 확대 및 교육대학원 AI 전공 신설
 - AI 교육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와 AI 기반 융합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연수 강화를 통해 AI 현직교사 전문가 양성
 - 일정 규모 이상 학교별 1인 이상의 디지털·AI 전문 산학협력교사 또는 정보교사 배치
- 디지털 교육 정착을 위한 1인 1 태블릿 기기 확대 보급
 -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인 1 태블릿 기기 지급
 -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급 후 단계적 확대

7.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컨트론타워를 재구조화하겠습니다.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의 역할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 국가 및 지역차원 인재양성정책 수립·시행
 -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복원하여 산재된 인재양성 정책·사업 통합 관리, 지역 및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 지역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및 기초자치단체 협업시스템 구축
 - 교육장 임기 보장 등 교육지원청 권한 및 역할 강화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기획, 예산 집행 권한 일부 인정
 - 교육경비보조,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학교복합시설, 지역특색 교육과정 등 실질적인 교육협력 시스템 제도화
 - 교육정책 영향분석·평가제 도입
 - 교육정책의 설계 및 결정시 사전에 교육정책 타당성과 실효성, 교육현장 업무부담 등 분석 평가
 -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 참여 온라인 플랫폼 설치·운영
-

- 학부모회·학생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권 확대 및 학생 참여 보장 추진

8. 대학체제 대전환으로 균형발전과 대학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산업체-지자체-대학 동반성장형 ‘지역대학혁신체제’ 조속히 확대
 -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육비 집중 투자
 - 지역에 따라 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법인’ 설치
 - 학부단위, 권역별 공유국립대학 체제 및 국·사립대학 공유체제와 공동입학·학위 등이 가능한 연합체제 구축
 - 지역소재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지역 출신 우선 채용 강화 등 지역 정착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 마련
 - 정부 내 ‘대학서열해소위원회’ 설치
- 대학 전공과 직업 간 미스 매치 해소
 - 각 부처 산학연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정해 통합적 기획 추진
 - 대기업·중견기업 계약학과 활성화 및 내실화, 대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강화
 - 대학(기술지주회사)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공동투자·인수하여 운영
 - 산업체 취업 및 재교육 기능을 하는 계약학과에 대해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평가 인증제 도입
- 대학평가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 사학비리 근절 추진
 - 대학 재정 여건 개선 가능성이 없는 한계대학 구조조정
 - 평가제도 통합 및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
 - 대학 운영 상 불합리한 규제 대폭 개선

9.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사교육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교육 플랫폼 구축
 - EBS 온라인 학교 전환 및 교재 온라인 탑재, 취약계층 교재 무료 제공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온·오프라인 대입 컨설팅 지원 확대 및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
 - 중·고교 시험 교과서 밖 출제 금지 및 수행평가 공정성 강화

-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교육부 산하 '사교육대책위원회' (가칭) 설치 운영
- 사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교육 현황과 원인 등을 상시 점검
- 고액·불법 사교육 근절 및 처벌 강화
- 사교육 유발하는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개선

○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 학점비례등록금제 도입으로 소수 학점을 이수하는 대학생에게 합리적 등록금 책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모든 학부생과 로스쿨 포함 대학원생으로 확대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및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 추진
-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탕감

10.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로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

- 국립대, 연구중심 사립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과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 국가 집중 육성 분야, 특성화 전공 및 연구분야에 대해 교육과정·학점 교류, 복수 및 공동학위제,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축
-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안정적 지원

○ 기초학문 분야 집중 투자

- 인문사회, 문화예술, 기초과학 전문인력 육성 인프라 지원 및 양성체제 개편
- 우수 연구자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대학원 질 관리 강화 등 안정적 연구 여건 마련

○ 대학의 국제화 지원

-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및 활용, 우수 연구기관과 실질적 협력 확대 지원
- 아시아권 대학의 협력체제 구축, Asia-MOOC 플랫폼 공동 개발

○ 학문의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학술연구 평가·관리 체제 구축

○ 건전한 학문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별 연구윤리 강화

11.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 일부 저소득층에게 제공됐던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급 대상을 확대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
-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제 구축
 - 기초자치단체별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및 중앙정부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 체제 구축
 - 중장년층의 이·전직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방, 학업보조금 및 학자금 융자 등 지원
-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을 연계한 학습·훈련이력 관리시스템 제공(K-MOOC, 디지털 집현전, 평생학습관, 방송통신대 등)

12.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및 공공입학사정관계 도입
 -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통해 각 대학 수시전형 과정 모니터링 및 신입생 선발 결과 분석 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수시전형의 모범 사례 발굴·전파, 입시 부정 철저 조사 및 엄단
 - 정부 선발 ‘공공 입학 사정관계’로 수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에 교사 참여 확대
 - 수능 문항 검토에 대학생 참여 추진
 - 대입 전형 선발 인원 합리적 조정으로 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
 -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과도하게 높은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 합리적 조정
 - 국가교육위원회 주도 2028학년도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
-